

OCI, 세금 1300억원 “쟁탈전”

인천시, 2008년 지방세 500억원 감면 ... 폐석회 처리도 문제

인천시가 OCI(옛 동양제철화학)로부터 1200억원대의 세금을 추정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최근 남구에 대한 감사 결과 남구가 2008년 5월 OCI에게 지방세 500여억원을 감면해준 조치에 대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기존 부과액에 100%의 가산세와 이자 등을 더해 총 1284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1월25일 발표했다.

OCI는 당시 인천시 남구 155만여㎡의 공장 부지를 신도시 등으로 재개발하기 위해 자회사인 DCRE를 설립한 후 남구청에 기업분할 감면을 신청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당시 OCI가 부채와 자산을 모두 인수한 적정한 기업분할이라고 주장했고 남구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공장 부지에 쌓인 폐석회 처리비용 등 부채 일부를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방세 재추징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DCRE는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은 것을 반복하는 행정처분은 온당치 않다고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DCRE 관계자는 “폐석회 처리 비용을 DCRE가 승계하지 않은 것은 2003년 인천시·남구·시민위원회·OCI 등 4자 간에 체결한 폐석회처리 협약 때문”이라며 “기업분할 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세금 감면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세금 감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세금 재추징과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성명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면 엄청난 세금 감면은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인천시는 세금을 추징하고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관련 책임자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26>